

정무위 국감 금융권 화두는 ‘즉시연금·암 보험·MG손보’

10일부터 20일간 45개 기관 감사 윤석현 금감원장에 집중 추궁 전망 금융위·금감원 참고인 20명 채택 주요 생보사 CEO 증인 참석 ‘불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주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암 보험 분쟁,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 국감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매년 수십 명의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지는 상임위로 올해도 어느 상임위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 관측이다.

1일 정치권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11~12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총 20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의 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및 일괄지급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5만5000건의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해 일괄지급을 권고하면서 논쟁이 심화됐다.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

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일괄지급’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거부한 상태다.

한화생명도 아예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 8월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려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에도 약

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구제가 맞다고 보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원장에게 즉시연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즉시연금과 함께 약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분조위는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으나 교보생명은 기각했다.

다만 즉시연금과 암보험과 관련해 주요 생보사 CEO가 증인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기업 총수를 비롯해 주요 기업과 금융사 CEO가 증인으로 거의 불리지 않았다”면서도 “종합국감 때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편법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김동진 전 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다. MG손보의 지분은 PEF(사모투자펀드)인 자베즈제2호와 새마을금고가 90.23%와 9.77%씩 보유했는데 자베즈제2호의 최대주주도 새마을금고다.

2015년 5월 당시 자베즈파트너스가 2012년 그린손보(현 MG손보)를 인수할 당시 단순투자자(LP)로 참여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LP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금감원 조사 밝혀졌다. 앞서 2014년 금감원은 400원을 유상증자해 실제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9월 말까지 RBC(보험금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권고받은 상태”라며 “유상증자도 사실상 무산됐는데 국감 출석까지 하게 돼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식에 참석해 유해 봉송이 끝난 후 국군 전사자들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뉴스1

文 ‘강한 군대’ 주문... “힘 있어야 평화 지속”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식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서 개최 68년 만에 온 6·25 전사자 유해 봉환 유엔 참전군 등과 퀘서 오찬 경축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축하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핵심인 장병에 대한 배려와 국방 개혁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은 차별없이 존중받고 진정으로 국가와 군을 자랑스러워할 때 용기와 헌신을 갖춘 군인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딸과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돼야한다. 전력에서도 최고가 돼야하며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소통하는 군대,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 경찰관·해경·소방관 등에 제대군인 채용 확대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의 도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점심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역과 예비역 장병, 유엔군 참전 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경축연도 열었다.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의 날 경축연을 청와대에서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고,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 스스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완성하고, 개혁의 실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믿는다.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군에게 국민은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엔 68년 만에 조국을 찾은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행사에서 봉환한 64위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 우리 국군으로 판명된 전사자들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문희상 “남북국회회담, 11월로 생각”

(국회의장)

최태복 北의장에 동의 답신와 여야 5당 대표 포함 30명 규모 태스크포스 구성... 확정 아냐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남북국회회담과 관련, 오는 11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 27일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체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치를 보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확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는 데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안정적으로 북측에서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넘어가는 중요 전환기인데 국회와 정당이 다시 한번 시각을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남북문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다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평화가 자리 잡게 하느냐에 대해 조금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달라진 시대에 국회가 가장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번 남북에 함께하지 못한 2당 대표가 꼭 남북국회 회담을 함께해서 북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걸으면서, 그 속에서 비준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



1일 오전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기국회 기간(11월)에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취재진에게 “한국당은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당연히 함께할 것이고, 평양에서 하면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대표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문 의장이 원내 대표들과의 협의 결과를 전했다”며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은 의석을 손해 보겠지 만 그것보다는 대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회의원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시간이 갈 것은 가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연합뉴스